

한국의 지적 장은 식민화되었는가?

김현경*

머리말

“지적 식민주의”는 지난 몇 년간 한국 지식인들을 지배한 화두 가운데 하나이다. 현실사회주의의 몰락을 전후하여 유행하기 시작한 포스트모더니즘이 이른바 “소칼 사건”을 계기로 한풀 꺾이면서, 지성계의 일각에서는 서구학계의 동향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풍토를 반성하는 목소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었고, 이는 인문학의 전반적인 위기 속에서, 논문의 틀을 벗어나 대중과 더 잘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글쓰기를 모색하는 흐름과 결합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기지촌 지식인”이니 “서구이론의 보따리 수입상”이니 하는, 한국 지식인의 주변적 정체성을 야유하는 표현이 인구에 회자되었고, 그와 함께 한국의 지적 장이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별다른 도전을 받지 않고, 일종의 상식처럼 자리잡기에 이르렀다. 한국의 지성계의 풍경을 특징짓는다고 생각

*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강사

되는 일련의 병리적 현상들은 이리하여 모두 식민지 시대의 제도적, 정신적 유산 탓으로 돌려졌다.

하지만 한국의 지적 장이 식민화되어 있다면 어떤 의미에서 그러한 것일까? 그것은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식민화의 종속변수일까? 아니면 단지 식민지적 과거의 잔재로서 한국 지식인들이 은밀히 나누어가지고 있는 정신적 외상 내지는 콤플렉스의 발현일까? 지적 장이란 도대체 “식민화”될 수 있는 것일까? 서구의 거대이론이 우리의 의식을 식민화한다는 주장은 이론의 보편성을 부정하는 게 아닌가? 그리하여 과학자 공동체의 존립기반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닌가?

“지적 식민주의”라는 말이 처음 사용되었을 때, 거기에는 분명히 현실의 어떤 측면을 지적하고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정치적 효과를 갖는 한에 있어서 이 용어의 모호하고 은유적인 성격은 용서할만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이 표현이 하나의 클리셰가 되어버린 지금, 우리는 한번쯤 그것이 개념적인 도구로서 얼마나 유용한지 검토해보지 않으면 안된다.

이 글은 “지적 식민주의” 담론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글은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1절에서 우리는 한국의 지적 장이 식민화되어 있다는 증거로서 원용되곤 하는 일련의 비정상적/병리적 현상들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2절에서는 이 현상들을 “지적 식민화”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할 때 이 “식민화 colonized” 혹은 “식민적 colonial”라는 형용사가 가질 수 있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의미를 비교할 것이다. 3절에서는 “지적 식민주의” 담론을 기각해야 하는 이유를 경험적인 면과 논리적인 면 양편에서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는 국제적인 지식교류에서 나타나는 비대칭성을 설명하는 대안적인 시각을 모색해볼 것이다..

1. 지적 식민화의 증거들, 혹은 징후들

한국의 지적 장이 식민화되었다는 증거, 혹은 징후들로는 흔히 다음의 여섯 가지가 지적된다.

1) 너무 많은, 게다가 계속 늘어나는 해외 유학생

한국에서 유학은 사실상 제도화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유학은 더 이상 개인들의 우연한 선택이 아니라, 제도적인 필연으로, 지적 장의 재생산에 있어서 불가결한 계기로 나타난다. 마치 한국의 지적 장이 그 자체로서는 불완전하고, 외부로 향하여 열려 있다는 듯이, 그래서 그것을 감싸고 있는 <외부>, 혹은 그것을 아우르고 있는 더 큰 시스템의 도움 없이는 재생산될 수 없다는 듯이. 개인의 수준에서 본다면 이는 유학이 학교라는 사다리를 따라가며 이루어지는 “세속적 순례”의 마지막 단계를 구성함을 뜻한다. 식민지 시대 이래 한국 지식인들의 교육과정은 메트로폴리스에서 완성되었다 - 식민의 본국, 혹은 학문의 본고장에서. 유학의 경험이 없는 연구자는, 비록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땀다고 해도, “본고장”으로 유학을 다녀온 동료에 비해 불충분한 교육을 받았다고 여겨진다. 그가 받은 박사학위는 말하자면 외국대학의 박사학위에 비해 한 등급 뒤떨어진다. 이러한 사회적 통념은 아카데미 안에서 그에게 주어진 주변적 지위를 정당화하며, 동시에 끝없이 이어지는 유학의 물결을 설명한다.

2) 외국유학경험자, 특히 미국박사학위 소지자가 명문대의 교수직을 독점하는 경향, 혹은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자들이 학문적 장(場)의 주변으로 밀려나는 경향)

1) “이제 외국 유명 대학의 박사 학위가 학문적 자질의 보증서로 통용되고, 교원임용과

《부록》에서 보듯이, 국내 대학들이 해마다 배출하는 박사학위 소지자는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돌아오는 사람의 몇 배에 달하며, 후자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나지만 (그림 1), 교수시장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몫은 고정되어 있다. (그림 2). 더욱이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와 같은 명문대학에서는, 1985년과 1996년의 상황을 비교해보았을 때, 의대나 간호대 같이 “자급자족적인” 몇몇 과를 제외하면, 최종학위를 국내에서 취득한 교수의 수가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그림3~그림6).

유학을 떠나는 학생들이 대체로 국내 대학원의 박사과정에 진학한 동료들에 비해 더 유복한 환경 출신이라고 가정해도 좋다면, 이들이 귀국하여 학계의 중심에 자리 잡는 것을 우리는 교육을 통한 계급의 재생산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계급관계는 유학을 매개로 하여 학문적 장 내부의 역학관계로 번역된다고 말이다. 나아가, 좀더 직접적인 수준에서, 1950년대부터 대거 학계에 진입한 미국유학출신자들은 각각 집안에 한두 명쯤 일본에서 유학한 친척을 그 부모세대에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 볼 수 있다. 70년대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어느 인류학자가 다음과 같이 회고했듯이. “할아버지와 아버지 세대는 배를 타고 일본으로, 서양으로 유학을 떠났고, 이모와 우리는 모두 노스웨스트라고 쓴 미국 회사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조혜정 1994: 162). 이 문장은 지적 장의 계급적 재생산에 대한 환유처럼 들린다. 유학이 신식민지적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고 비난할 때, 사람

정에서 하나의 ‘통행증’으로 활용되고 있는 우리의 학문풍토가 수술대에 올려 놓아야 한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한국 사회학과 그 사회학 공동체가 스스로 그 안에 품고 있는 학문적 신식민지성에 다름아니기 때문이다.” (정일준 1991: 137~138)

“나는 한국학계의 상황이 후(後)식민지 상태라는 혐의에서 얼마나 자유로운지 자주 의심스럽다. 좀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한국정치학은 미국식 언어와 학문풍토에 지나치게 물들어 있어, 현실정치를 설명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 균형감각을 잃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1960년대 이후 근대화 정치이론을 수입한 이후 본격화된 미국 유학과 미국대학의 박사학위는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마치 대학이나 연구소에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취득해야 할 면허증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홍성민 2003)

들이 염두에 두는 것은 식민지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배계급의 연속성을 보증하는 유학의 이러한 기능이기도 하다.

3) 학술언어로서 영어에 부여된 과도한 중요성²⁾

말할 것도 없이, 영어가 지배적인 학술언어로 통용되는 것은 영어권 국가에서 유학을 한 사람에게 유리하다. 사실 미국박사가 특별대우를 받는 것은 영어를 잘하기 때문이다. 영어를 잘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 미국학계의 최신유행이 뭔지 안다는 것, 국제적으로 유명한 저널에 논문을 실을 수 있다는 것 등을 의미한다. 연구자의 유능함이 이러한 척도로 측정되는 한, 영어를 잘하는 미국박사들이 지적 장에서 지배적 분파를 이루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2) “해방 이후 사회과학계에서는 한국 사회에 대한 분석력보다는 영어 구사 능력, 즉 파농이 말했듯이, ‘모국의 언어를 얼마나 잘 구사하는가, 모국의 이론을 얼마나 빨리 받아들여 소개하는가가 직업적 학자로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였다.’ (김동춘 2000: 229)

“미국, 유럽, 국내 손으로 박사학위에 순위가 매겨져 교수채용에 보이지 않는 평가 기준으로 작용하는 동안, 학자의 치열한 문제의식이나 원숙한 학문적 훈련 등이 평가 받지 못한 채, 그저 영어회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학교수가 되는 오늘날의 분위기. 이것이 바꾸지 않는다면 학문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커다란 잘못이 아닐 수 없다.” (홍성민 2003)

“필자는 영문학자라는 직업상 미국 방문을 가끔씩 하게 되는데, 미국대학에서 강의를 맡든 학술대회에 참석하든, 끊임없이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악령처럼 영어 문제는 내 두뇌조직의 어딘가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다. 영어라는 구슬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한, 그리고 그것을 마음대로 놀려대는 구슬놀이의 대가들 앞에서, 자신의 보잘것없는 구슬놀이 실력을 마지못해 보여줄 수밖에 없게 된 시골 선생의 난처한 자의식이 있는 한편으로, 나에게도 너무나 잘 놀릴 수 있는 나 자신의 구슬이 따로 있다는 억울한 생각 때문에, 이 주눅은 때로는 분개가 되고 때로는 한탄이 된다. 가령 학술대회장에서 못다 한 토론을 동료 한국인들과 밤을 새워 우리말로 마음껏 해보는 것으로 복수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변방인의 비애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는 것이다. 남의 구슬로 놀이해야 한다는 그 한스런 규칙을 바꾸지 못하는 이상, 변방의 지식인으로서 어찌 이 모든 곤혹스러움과 구차스러움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인가?(윤지관 2001: 112~113)

4)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의 미국화³⁾.

한국의 대학제도는 미군정기에 큰 틀이 만들어진 만큼 처음부터 미국식이었다. 미국에서 유학을 한 지식인들이 해방 이후의 연구자세대를 대표하면서 학계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함에 따라, 형식의 모방은 내용의 수입으로 이어졌다. 연구주제, 방법론, 이론적 시각, 참고문헌 등등. 이러한 콘텐츠의 수입은 흔히 “보따리 장사”의 형태로, 즉 “중심”에서의 “순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지식인들의 개별적 기여에 의해 이루어졌다. 가령 미국에서 유학한 교수는 자신이 거기서 필기한 노트들을 가지고 강의하고, 거기서 읽은 책들을 학생들에게 읽힘으로써 이러한 수입상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가 소개하는 이론이나 개념들은 “물 건너온” 것인 만큼, 일종의 아우라를 띠며, 자생적인 이론들 및 개념들보다 더 우월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는 미국 학계에서 정전화된 텍스트들의 권위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발화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에 독창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변부의 지식인으로서 그는 어차피 자신에게 독창적인 것을 생산할 능력/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중심>의 지적 생산물들을 수입하고 번역하는데서 자신의 역할을 발견한다.

3) “그러나 이 시기 (해방후 - 4.19 이전) 한국사회학의 학문적 기반은 대단히 취약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해방 직후에는 구미의 사회학 이론을 일본학계에서 취사선택하여 해석한 것을 국내에 재수입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고, 한국전쟁 이후부터는 미국사회학이 물밀 듯이 직수입되어 초창기의 한국사회학계의 공간을 거의 모두 차지해버렸습니다. 이후 새로운 사회학이론과 개념들이 ‘보편성’의 옷을 입고 계속 소개되었지만, 한국사회현실이나 역사적 경험과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는 문제의식조차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 [1980년대에 사회학계 내부의 자기반성적 노력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학의 지배적 패러다임과 문제의식은 여전히 외래적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1980년대의 지적 노력조차도 또다른 구미이론의 보편성을 한국사회에서 확인해보려는 측면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한국사회의 이론적 논의가 풍성해질수록 역설적이게도 외국이론에의 종속성을 탈피하기 보다는 오히려 더욱 매몰되어간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신용하 1994)

5) 외국사상의 무분별한 수입과 유행 (미국의 유행을 뒤늦게 수입)⁴⁾

〈지적 유행〉이라는 표현은 단지 비꼬기 위한 것만이 아니다. 실제로 우리는 쿤이 말하는 〈패러다임〉이 인문사회과학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는다. 인문사회과학의 전개는 〈정상과학〉과 〈위기〉의 교대보다는 차라리 이론들의 〈유행〉이라는 관점에서 더 잘 서술될 수 있

4) “어쨌든 우리의 인문학은 여기까지 왔다. 어디까지? 소수의 번역전문가 집단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많은 수의 지식인들이 둘러붙어 “그 문장이, 또는 그 이론이 진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알부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하는 여기까지. ‘말 없이 사는 괴로움으로 각자의 밀실에서 슬퍼 눈물을 흘리며 자폐증에 걸리는 여기까지.’(조혜정 1994: 18)

“그러나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그런 치열한 ‘문제의식’이 우리에게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 철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구체적 ‘현실에서 철학하기(philosophieren)’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양철학자들의 철학하기의 결과물인 추상적인 ‘사상’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메타현실, 그것도 서양의 메타현실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철학자들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것이 마치 일차적인 현실인 양 착각하고 있다. 또 미국과 유럽의 현실과 우리의 현실이 동일한 역사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문제와 우리의 문제가 동일하다고 여긴다. 그보다 더 심한 경우 “철학자는 현실에서 초연해야 한다”고 우기는 사람들도 있다. 이처럼 현실에 대한 치열한 문제의식이 없기 때문에, 모두들 서양에서 유행하는 최신식(?) 지식상품에만 민감하게 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늘 새로운 지식을 먼저 수입하는 사람이 학문시장에서 각광을 받는다.”(최종욱 1997: 102)

“여러분도 느끼시다시피 현대 프랑스의 새 이론들을 주제로 삼는 그 솔한 논의와 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에 대해서, 또는 그 논의를 펴는 자신에 대해서 대개는 거의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특징적이라면 특징입니다. 아무리 전공논문이라 할지라도 “나는 왜 여기서 그 논의를 다루는가?” “왜 유독 90년대를 배경으로 해서 그것에 지적 관심을 갖는가?”라는 식의 자의식이 없습니다. 게다가 어렵고 신비하게조차 보이는 용어들로 프랑스 철학의 논의가 전달될 뿐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사이에서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질문은 빠진 채 수사로만 가득 찬 논의의 되풀이가 만연되어 있으며, 사정이 이러할수록 일반 학생이나 대중이 “저것은 높은 수준의 얘기니까, 뭔가 대단한 얘기니까”라면서 푸코, 데리다, 라캉 등의 번역서를 아주 힘들게 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화가 나기조차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이론이든 그것이 우리에게 소통가능한 용어로 이해될 수 없다면, 그리고 어떤 번역서가 읽혀지지 않게 번역되어 있다면, 그것을 억지로 이해하려하거나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감히 단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무식한 사람들 축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자기가 다루는 텍스트나 자기가 배우려하는 논자들의 이야기가 자기 나름의 문맥에서 해명이 잘 안된다면 거기서 끝내는 편이 더 낫다고 판단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마치 중세 수도원에서 나온 신비스러운 책자를 대하듯이, 한 자 한 자 문자해독하는 태도는 제대로 된 학문적인 태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믿습니다.”(김성기·이정우 1997: 65-66)

을 것 같다. 특정한 이론의 성공 혹은 특정한 접근의 우세, 특정한 저자의 망각이나 르네상스는 우리의 과학적 커뮤니티가 이성의 활동보다는 연구자들 간의 〈구별짓기〉 투쟁에 의해 지배됨을 말해준다.

이러한 투쟁에 있어서 주변부 지식인들은 태생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 지적 세계의 프티 부르주아서, 그들은 유행을 창조하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해야 한다. 게다가 그들이 간신히 〈중심〉의 동료들을 따라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중심에서는 다른 것이 유행한다. 유행에 뒤질세라 주변부의 지식인들은 〈한물 간〉 이론들을 얼른 내팽개친다. 이 이론의 수용이 피상적이었던만큼, 여기에는 아무런 아쉬움도 없다. 외국이론들이 일정한 시차를 두고 한국의 지적 장을 차례로 지배하는 것은 이런 메카니즘에 의해서이다.

6) 〈국산〉 이론에 대한 평가절하⁵⁾

외국의 최신유행에 대한 열광은 촌스러운 〈국산품〉에 대한 평가절하와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국내에서 생산된 연구들은 외국에서 수입한 부품들을 조립하여 만든 싸구려 공업제품 취급을 받는다. 〈구별짓기〉를 추구하는 소비자들 - 그들의 맨 앞에는 연구자들 자신이 있다 - 은 그러므로 당연히 외제를 찾는다. 논문의 말미 참고문헌에 외국어로 된 책 이름을 줄줄이 달아놓는 것은 그 저자가 지적 상품들의 소비자로서 어느 정도 수준이나를 말해준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푸코나 라캉 혹은 하버마스의 원전을 인용하는 것은 루이 뷔통이나 샤넬 제품을 소비하는 것과 비슷하다.

5) “사회과학 논문을 읽다보면 어떤 학자들은 한국의 연구자들의 연구논문을 전혀 인용하지 않거나, 설사 인용하더라도 오직 자신이 국어로 발표한 논문만 열거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 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연구자는 영어 논문만 인용하고, 독일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연구자는 독일어 논문만을, 프랑스에서 유학한 학자는 프랑스어 논문만을 주로 인용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이런 저서나 논문을 볼 때마다 이상한 느낌을 갖는다. 그것은 이들의 인용태도로부터 자신도 한국인이면서 자신을 제외한 한

2. 지적 식민주의 담론의 두 가지 버전

“지적 식민주의”라는 개념은 얼핏 보기에 이러한 현상들을 깔끔하게 설명해주는 것 같다. 하지만, 이 단어의 의미는 모호하고 은유적이다. 이 단어가 사용되는 방식, 혹은 이 주제에 대한 접근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 가능하다. 하나는 “신식민주의적 접근”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데, 지적 식민화를 한국의 전반적인 대미종속의 한 측면으로 간주한다. 다른 하나는 탈식민주의 이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 단어를 매우 막연하게 정의하면서, 식민지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주변부 지식인들 특유의 콤플렉스에 초점을 맞춘다.⁶⁾

국인 연구자들을 경멸하는 오만함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며, 동시에 자신이 연구자로서 수련 과정을 거친 그 정신적 모국의 지적 성과를 지적인 사표로 자리매김한 다음, 그것만을 배우고 인용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과시하는 식민화의 하수인과 같은 태도가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것은 서구 세계, 혹은 자신과 관련 있는 서구 특정 국가의 지식 세계와의 근접성 정도를 통해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려는 태도가 드러난 것임에 틀림없다. 이들의 행동에서 상전과 한편이 되어 ‘주인보다도 하인을 더 멸시하는 마름’의 노예적 퍼스낼리티의 편린을 엿보게 된다. 이들은 ‘한 수 아래인 한국의 연구자들과 토론하기보다는 선진 외국의 학자들의 글과 개념들을 인용하기를 즐기면서, 지적인 독백을 계속하는 셈이다.’ (김동춘 2000: 230~231)

“식민지적 문화에 젖은 ‘지식인’은 머리도, 감성도 식민지화되어 버려서 외국에서 새로 나온 패션을 곧바로 자기에게 어울리게 입듯이, 새 이론을 금방 근사하게 자기 것으로 치장해내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다. 그의 ‘수준높은’ 감각은 ‘수준낮은’ 자생적 예술품에 혐오감을 갖게 하며, 자생적 이론을 거들떠보지도 않게 한다. 같은 내용의 말을 들었더라도 자기 나라 학자들이 한 말은 인용하지 않고, 외국의 석학이 쓴 책만 인용한다.

물론 그들에게는 스승이 없다. 지식이 축적되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나는 항상 스승의 문제를 생각해보곤 한다. 화파는 없고 당파만 있는 학문계라는 자체 진단을 우리는 스스로 해왔다. 이 땅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많은 지식인들은 아직도 유학파이고, 또 그들이 외국이론에 매달리는만큼 그들이 떠받드는 학자는 이땅의 학자가 아니다. 그들은 ‘진짜 스승이 없거나 있더라도 외국에 있으며, 이곳에 있는 스승은 다른 용도로 필요하다. 이들은 설날에 ‘스승’에게 세배를 드리러 가고 인간적 충성을 수시로 확인해가면서 사회적으로 안정된 연결 결속망에 들어간다. 이 땅의 스승은 학문적 영감을 주는 존재라기보다 기득권층에 속하기 위해 필요한 연결로서의 의미가 더 큰 것이다.’ (조혜정 1994: 24-25).

- 6) 이러한 구분은 논리적인 것일 뿐 지적 식민주의 논의의 참여자들이 모두 이 구분에 따라 두 진영으로 갈린다는 의미는 아니다. 또 저자들이 일관성있게 둘 중 하나를 견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조혜정의 경우에서 보듯이 하나의 저자 안에 두 접근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더 흔하다.

첫 번째 접근의 출발점에는 80년대에 진보적인 지식인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공유되었던 “불완전한 해방” 테제, 즉 일제의 패망은 한국민에게 진정한 해방을 가져다주지 못하였고, 분단과 또 다른 외세에 의한 지배로 이어졌다는 인식이 놓여 있다. 지적 식민화는 이 미국이라는 새로운 외세에 대한 남한의 신식민주의적 예측이 지적 장에서 관철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한편으로는 미군정기에 이루어진 교육제도의 미국화가, 다른 한편으로는 일제시대부터 해방 이후에 이르기까지의 지배계급의 연속성과 그러한 연속성을 보증하는 수단으로서의 해외유학이 강조된다. 한국의 지적 장이 미국의 영향력에 대해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유지하고 있느냐(혹은 할 수 있느냐)와 같은 문제는 대답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이 접근의 지지자들은 지적 장이 친미적 인사들로 채워져 있는 한, 미국에 대한 학문적인 종속은 불가피하다고, 별다른 유보 없이 믿는 듯하다.

다음의 인용은 지적 식민주의 담론의 “신식민주의적 버전”을 적절히 요약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해방’ 이후 한국전쟁에 이르는 격렬한 투쟁기를 거쳐 ‘친미반공 분단종속체제’로 정착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체제 아래서 학문적인 종속 질서가 형성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의 신식민적 교육구조 형성은 물질 측면과 제도적 측면 그리고 인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그런데 이중 인적 측면은 앞의 두 측면을 전제로 하면서 그것을 완성시키고 재생산하는 핵심적 요소라는 점에서 보다 중요하다. 사실상 신식민주의의 특징은 종속국을 정치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종속시킨다는 점에 있다. 이때 유학이 낳는 효과는, 유학생 개개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중심국의 발전된 학문의 습득과 소개라는 의미보다 종속국의 지적 풍토를 문화적으로 식민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반성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정일준 1991: 132)

유학은 여기서 지적 식민화의 증거로 간주되며, 지적 식민화는 다시 미국에 대한 한국의 신식민지적 종속의 한 측면으로 환원된다. 문제는 이 인용문의 저자가 신식민주의에 대해서도, 지적 식민화에 대해서도,

분명한 정의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가 이 인용문이 실린 글의 여기저기에서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를 언급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자신의 논지를 80년대 한국 마르크시즘의 공식담론에 비끄러매려는 그의 노력은 별로 성공적이지 않다. 후자의 수사학은 불필요한 덧칠처럼 나타나며, 그 증거로서, 그의 글에서 “신식민주의”라는 단어는 “문화적 제국주의”나 “종속”, “중심-주변관계” 등과 완전히 대체가능하다. 이 용어들은 각각 그 이론적 맥락이 상이한데도, 저자는 이를 무시하고, 동일한 현실을 지시하기 위해 그것들을 마구 섞어 쓰는 것이다.

나는 “신식민주의”에 이처럼 막연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이 저자만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단어의 용법은 사실 언제나 애매하고 인상주의적이었으며, 그리하여 80년대의 마르크스주의 논객들은 한국사회구성체의 신식민지성을 선형적으로 단언한 뒤에, 한국 사회의 남루한 현실 속에서 손쉽게 그 증거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90년대에 한국경제가 IT 산업을 중심으로 눈부신 도약을 이루면서 이 단어가 슬그머니 버려진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한국의 지적 장을 “식민화”라는 관점에서 분석하려고 할 때 우리가 부딪치게 되는 파라독스는, 한국의 경제발전이 “지적 식민주의”의 완화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그 반대로, 유학생의 수는 경제성장의 리듬에 맞추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국내박사의 주변화나 미국학계의 이론적 동향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 같은, 식민화의 다른 “징후들” 역시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지적 식민주의”라는 개념을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 그것을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식민화 내지는 종속과 분리하는 것이 불가피함을 말한다. 물론 이러한 분리에 의해서 이 단어의 의미는 더욱 희석될 것이다. 우리는 식민화의 주체가 누구인지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될 것이고, 다만 그것의 “효과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다음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우리는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구체적인 적(敵) 대신에, 지구상의 어느 특정한 나라

와도 대응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식민지들을 주로 지적, 도덕적, 문화적 수준에서 지배하는, 거대한 하나의 (정관사가 붙은) “제국”과 조우하게 될 것이다.

식민화된 지식인이 매판지식인일 필연성은 없다. 중심부 제국의 지배와 자본축적을 위해 식민지 모국의 자원을 동원하고 개발하는데 동원되는 매판지식인과 식민화된 지식인은 차별화된다. 그러나 제국의 문화, 문명, 지식, 도덕, 매너, 취향을 기준으로 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나아가 모국의 동포들과 비교하여 우월감을 성취하는 분열적 지식인이라는 점에서는 연민을 일으키는 대상이다. 식민화된 지식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혹은 영역을 제국의 기준에 따라 재구성함으로써 결국은 중심부의 주변 영토가 되도록 식민화시키는 마디(node) 역할을 하지만 이는 제국의 지배를 위해서라기보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인정받기 위함이다. 즉 모국에서 동포들과 위계적으로 구별되는 위치, 입장, 역할, 영향력을 확인하고 유지하기 위한 욕구가 우선하며 제국의 지적, 도덕적, 문화적 지배는 그 결과로서 초래되는 사회적 효과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제국의 중심성이 유지되어야 자신의 모국에서의 중심적 위치도 유지된다는 점에서 식민(화된) 지식인들은 제국의 지배에 기여한다(유선영 2002: 199-200)

유선영은 여기서 경제적이거나 정치적인 지배 대신에 “제국의 도덕적, 지적, 문화적 지배”에 대해서, 오직 그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신식민주의적 접근이 후자를 전자의 반영으로 환원하는 경향이 있는데 반해, 그녀가 채택한 탈식민주의적 접근은 후자를 식민화된 지식인들이 별이는 구별짓기 게임(jeu de distinction)의 효과로 간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들의 영토를 제국의 변방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바로 이 지식인들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 말이 식민화의 주체가 그들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제국의 지배는 그들의 무의식의 수준에서 작동하기 때문이다. <식민지배의 일상적 폭력은 식민지 주민들에게 정신적인 문제들을 야기하며, 그들이 여기서 벗어나려면 제국주의에 폭력으로 맞섬으로써 스스로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한다>는 프란츠 파농의 주장을 원용하면 서, 유선영은 한국 지식인들의 서구추종을 그들의 역사적 경험과, 즉 일

본에 의한 한국의 식민지배와 연관시킨다.

식민지배를 투쟁을 통해 자력으로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식민역사의 열등감, 외상, 상흔, 죄책감은 낙인처럼 의식과 무의식에 각인되어 있다. 이런 정신적 심리적 상태에서는 자신과 유사하다고 간주될 수 있는 종족/ 집단과는 극단적으로 거리를 두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자신의 동류에 대한 차별, 폭력, 배제가 일상화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준거집단(백인/서구)을 정체성의 이상적 모델로 간주하여 흉내내기를 통해 자신의 낙인을 은폐하고 지워버리기 위한 노력을 경주한다(유선영 2002: 209).

이러한 관점은 “식민적”(colonial)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극단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유선영은 그것을 사실상 주변부 지식인들의 속물주의를 비판하기 위해 사용한다. (마치 중심부의 지식인들에게는 그러한 속물주의가 없다는 듯이.)⁷⁾

조혜정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형용사를 삶과 지식이 유리된 상태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그녀에 의하면 “자신의 문제를 풀어갈 언어를 가지지 못한 사회, 자신의 사회를 보는 이론을 자생적으로 만들어가지 못하는 사회”는 모두 “식민적”이다. 마찬가지로 식민화된 지식인은 지식을 생산하지 못하는 무능력에 의해서 본국의 지식인과 구별된다(조혜정 1992: 22).

요약하자면, 지적 식민주의에 대한 탈식민주의적 접근은 지식의 국제적인 생산과 유통에 고유한 비대칭성을 주변부 지식인들의 식민지적 심성으로 설명한다. 이 심성은 특정한 물질적 혹은 제도적 기초로 환원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역사적 경험으로 소급된다.

7) “이러한 인문적인 거대담론에 대한 집착은 무/실용보다 문을 중시해온 전통적인 가치 체계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지식은 그 자체로 의미있는 것이기보다 현실효과(reality effect)를 초래할 수 있는 ‘힘’으로 환치되는 것이어야 했다.” 그러한 집착은 “명품, 유니폼, 뱃지, 완장, 고급 브랜드, 원산지 표시, 고가품, 대형 기념물과 큰차와 대형평수 아파트에 집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족을 비롯한 타자와의 구분짓기에 열망하는 식민경험과 기억에서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의 분열적 정체성의 표출”이다(유선영 2002: 205-206).

물론 “탈식민주의적 접근”이 “신식민주의적 접근”과 언제나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조혜정이 “식민지”라는 단어의 유용성을 인정할 때, 그녀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수준에서 존재하는 불평등한 관계를 염두에 두는 게 분명하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권력은 여럿이며 흩어져 있다”고 말하면서, 그리고 한국사회는 종속에서 벗어날 기회들을 상당히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탈식민주의”라는 단어를 고집한다.⁸⁾ 다시 말하면, 탈식민주의적 접근에서는 한편으로는 문화적인 층위의 정치적인 층위로의 환원 불가능성(혹은 전자의 상대적 자율성),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종속 관계의 지속에 있어서 종속된 자가 수행하는 능동적인 역할이 중요하다.⁹⁾

3. 한국의 지적 장은 식민화되었는가? - 반론

위에서 우리는 “지적 식민주의” 담론의 두 버전을 구별하였다. 그런데 두 버전은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도 몇 가지 있다.

첫째, 지적 식민주의의 두 버전은 모두 한국의 학계의 “비정상성”(제도화된 유학, 미국박사학위에 대한 무조건적 우대, 미국의 이론적 유행에 대한 맹목적 추종, 등등)을 식민지적 과거와 연계시킨다. 한국의 지적 장이 충분히 자율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면, 이는 이 식민지 시대부터 생겨난 제도들과 관행들, 혹은 식민경험이 남긴 정신적 외상 때문이

8) “우리 지식인계는 현재 우리의 상황을 식민지와는 무관한 상태로 보는 이들과 ‘신식민지적’ 상태로 보는 사람들로 나뉘어져 있다. 나는 이 두 입장 어느 것에도 동조를 하지 않는다. 우선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이유로 나는 ‘식민지’라는 단어가 아직 우리 상황을 밝히는 데 유용성을 지닌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신식민지’라는 단어를 쓰지 않은 것은—사실은 이 단어를 쓸지 약간은 고민을 했었다—그렇게 부르기에 는 소위 ‘지배권력’이 너무나 다원화, 분산화되어 있고, 동시에 우리 자신들이 그 상태를 벗어날 가능성을 상당히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조혜정 1992: 24)

9) “다시 말해 우리는 서구의 식민지가 아니었음에도 자발적으로 서구제국의 시선과 기준을 내부화한 자발적 식민지이다.”(유선영 2002: 213)

라는 것이다.

둘째, 두 버전은 모두 “식민화”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지적 장 내부에 존재하는 대립을 내부/외부의 대립으로 환원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의 지적 장의 비정상적인 발전은 외부의 힘들에 의해 규정되었으며, 이는 외부의 힘들이 장 내부에 그 대리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그 대리자들은 물론 그러한 대리행위를 통하여 장 안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획득한 자들이다. 다시 말해서 장 내부의 지배/피지배 관계는 장의 자율성을 대변하는 세력과 그것을 침해하는 세력 간의 대립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이 개념은 지적 생산물의 보편적인 가치에 대한 부정을 내포한다. 물론 사회과학에 있어서 인식과 관심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하지만 “지적 식민주의”의 비판자들은 흔히 이 사실을 강조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생적 이론”과 “수입이론”을 구별하고, 이 이론들 각각의 소비에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기에 이른다. 마찬가지로 지적인 탈식민화는 사회학, 정치학, 철학 등 등의 “토착화”와 동일시된다.

이 세 가지 특징은 모두 “지적 식민주의” 담론을 기각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우선 첫 번째 특징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비판이 가능하다.

1° 한국의 지적 장을 특징짓는 비정상성은 한국에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식민지배를 겪은 나라에만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가령, 흔히 한국인들의 “식민지적 멘탈리티” 탓으로 돌리곤 하는, 서구의 지적 유행을 맹목적으로 수입하는 현상은 70-80년대 일본 지성계의 풍경에서도 두드러졌다. 오에 겐자부로에 의하면, 구조주의부터 시작하여 이 20년간 일본에 수입된 “새로운 문화이론들”(“new cultural theories”)은 일본사회를 이해하는데 진정으로 기여하지 못하였다. 이 이론들은 차례로 소비

되고 폐기되었을 뿐이다. 서구의 저자들은 성급하게 수입된 만큼 성급하게 버려졌다.

푸코를 수용하기 위해 바르트는 폐기되었고, 라캉을 버린 이후에야 데리다를 수용할 수 있었다. 물론 또 새로운 사상가가 나오면 사정이 달라질 것이다. 이 새로운 문화이론들을 유통시키는 것은 그것들의 유입에 찬성하는 소개자와 번역자들에게 어느 지점까지는 쉬운 일이었다. 문화적 영웅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그러나 이 찬성자들이 미국과 유럽의 일괄작업대 위에 유통시킬 이론이나 사상가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새로운 문화적 경향들은 막을 내렸다(Oe 1989: 203).

오에는 서구사상의 일본적 수용을 특징짓는 이러한 피상성을, 메이지 유신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오늘날에도 일본의 지적 저널리즘에 널리 퍼져있는 하나의 관념, 즉 ‘미국이나 유럽의 새로운 사상을 일본어로 번역하기만 하면 지식인의 역할이 끝난다’는 생각 탓으로 돌린다. 번역자와 독자가 공유하는 이러한 생각은 수입된 이론들을 일본사회의 맥락 속에서 재해석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도록 만든다.

만약 전문가들이 소개하고 번역한 새로운 문화이론들을 독자들이 일본의 현실을 해석하는 데 적용했다더라면, 그들의 이해는 더욱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을 것이다. 그러한 이해는 아마도 그 사상들이 탄생한 곳으로 재영향을 줄 만큼의 능력을 길렀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었다면 각각의 새로운 문화이론들이나 그것들을 일본에 소개하던 사람들이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운 채 남아 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일단 소개나 번역이 이루어지면 유럽 혹은 미국으로부터 일본으로 오는 일방통행의 과정은 완성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수용’과 ‘폐기’가 끝난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이론경향에 대한 지속적인 기대가 관습이 된 이유를 설명해준다(Oe 1989 : 204-205).

“새로운 문화이론”—구조주의, 탈구조주의, 포스트모더니즘 등등, 일군의 프랑스 사상가들의 이름과 관례적으로 결부되는 흐름들 혹은 이론들—의 일본적 수용에 대한 오에의 이러한 비판은 한국의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다. 실제로 지적 식민화에 관한 담론은 유사한 비판들로 가득 차 있다. 새로운 사상의 끊임없는 수용과 폐기를 가리키기 위해 오예가 사용한 “사상의 만화경”(Oe 1989: 203)이라는 표현이 앞서 인용한 유선영의 에세이에도 나타난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유선영 2002: 193, 196). 두 만화경에 차이가 있다면, 하나는 다른 하나가 오래전에 이미 보여준 이미지를 뒤늦게 보여준다는 정도일 것이다. “새로운 문화 이론”은 일본에서 유행의 절정에 달한 지 10년 뒤인 90년대 초반에야 한국의 지적 장 안에 들어온다. 하지만, 이런 사실로부터 일본의 지식인들이 “식민지적 심성”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까? “식민지적”이라는 형용사의 외연을 이렇게까지 확장하고 나면, 그것의 원래 의미는 희석되다 못해 사라지고 말 것이다.

2° 일본을 예외로 하고, 국제적 지식교류에서 나타나는 비대칭성이, 열강이 식민지에 근대교육제도를 이식하면서 시작되었다는 의미에서, “포스트콜로니얼한” 현상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에 대한 과거의 무게를 정확히 평가하는 일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앞에서 우리가 확인하였던, 국내박사의 주변화 경향은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한다. 왜 한국의 명문대학들은 1985년과 1996년 사이에 미국박사의 비율을 높였는가? (<부록> 참조) 이것이 식민지적 멘탈리티의 탓이라면, 왜 한국이 바야흐로 선진국의 대열에 끼어드는 시점에 이 멘탈리티가 더욱 강화되었는가? 이는 이른바 식민지적 멘탈리티가 식민경험과는 별개의 것임을 의미한다. 오늘날 아카데미의 미국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전후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식민지배에 대해 아무런 개인적 기억을 갖고 있지 않다. 서구에 대한 그들의 뿌리깊은 콤플렉스를—식민지적 멘탈리티란 다름 아닌 이 서구 콤플렉스이다—그들이 책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전유하는, 식민지 시대에 대한 집단적 기억으로 설명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한편, 지적 식민주의 담론에 내재한 환원주의적 경향과 관련해서는, 장(場)에서의 특정한 위치(position)가 반드시 특정한 입장(prise de position)과 조응하는 것은 아님을 지적해야 한다. 지적 식민주의를 비판하는 논자들은 때로 장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다. 이들은 바로 한국학계를 대표하는 그들의 위치 때문에 자연스럽게 민족주의적 성향을 갖게 된다. 게다가 이들은 아카데미에서 인정하는 상징자본(영어실력, 미국박사학위, 외국학술지에 기고한 논문편수 등)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발언이 “원한”(ressentiment)에서 나온 것이라는 의심을 받는 일 없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다.

역으로, 외국유학의 기회를 갖지 못한 주변적인 지식인들이 외국 이론의 수입에 앞장서는 경우도 많다. 이들은 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상징자본이 부족한 대신에, 대중적 지명도는 더 높다. 이들의 전략 역시, (교수 임용 등에서 점수로 환산되는) 학술적 업적을 쌓기보다는, 외국서적의 번역이나 대중적 학술지에의 기고 등을 통해, “지식인”으로서 인정받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지적 유행이라는 현상은 이러한 주변적 지식인 집단의 성장 혹은 비대화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 80년대의 마르크스주의 붐이나 90년대의 포스트모더니즘 붐을 떠받쳤던 것은 이 집단의 왕성한 소비력과 내부적 경쟁이었다.

끝으로, 지식생산물의 국제적 교환에서 나타나는 비대칭성을 “지적 식민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때 부딪치게 되는 아포리를 지적하기로 하자. 한국의 지식인들이 한국소설보다는 서양소설을, 한국의 학자들이 쓴 책보다는 외국의 학자들이 쓴 책을 더 즐겨 읽는다고 해서 정신적으로 “식민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지적 식민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셰익스피어에서 카뮈까지 오리엔탈리즘의 혐의가 있는 저자들을 모두 불태워버려야 하는가?(박홍규 1997: 580). 그리고 “자생적 이론”만을 소비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에게는 이른바 “자생적 이론”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자생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환기시켜야 할 것이다. 가령 “자생적 이론”들이 변주하기 좋아하는 “생명에 대립하는 문명(이성)”이라는 테마는¹⁰⁾ 서구사상사에서 긴 계보를 가지고 있다(Raulet et al. 1984 ; Colletti 1976). 이 낡은 테마가 양차대전 사이 독일에서, 그리고 소비에트 러시아에서 그린 복잡한 궤적들을 어렵잖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아래 다시 한국에서 전통이라는 포장지에 싸여 유통되는 것에 미심쩍은 눈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인들이 마침내 거대이론을 생산하는 단계에 도달했음을 순진하게 기뻐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서구사상의 수용이라는 관점에서 이 자생적 이론들을 꼼꼼히 검토해보아야 한다.

물론 지적 식민주의를 고발하는 논자들이 서구 사상을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조혜정이 “자신의 사회를 보는 이론을 자생적으로 만들어가지 못하는 사회”는 모두 “식민적”이라고 단언할 때, 비판의 초점은 서구사상에 내재한 제국주의적 요소보다는 오히려 주변부 지식인들의 사대주의적 태도에 맞추어진다. 그들이 자신들의 현실에 맞는 이론들을 취사선택할 정도의 자율성을 보여주지만 한다면, 그들이 소비하는 이론들의 “원산지”가 어디인지는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유연한 입장을 택한다고 해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한국의 지식인들은 왜 한국의 현실에만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한국사회” 역시, “동아시아”나 “지구촌”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상상된 공동체가 아닌가? 더욱이, 모든 현실이 현실에 대한 특정한 해석 속에서 비로소 구성되는 것이라면, 또한 그런 의미에서 각각의 책은 저마다 고유한 현실을 창조하는 것이라면, 한국의 지식인들이 수입된 책 속의 현실이 그들을 둘러싼 일상보다 더욱 “현실적”이라고 느낀다고 한들 무슨 잘못이겠는가?

10) 대표적인 예로 김지하를 들 수 있다.

4. 결론을 대신하여: 비대칭성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의 가능성

한국 지식인들의 상황은 <식민화> 보다는 <주변화> 라는 말로 훨씬 더 잘 요약될 수 있다. <주변화>는 <식민화>와 달리 현상기술적인 개념이다. 전자가 한국의 지적 장의 비정상성을 궁극적으로 <외부의 힘들> (그리고 장의 내부에 있는 그러한 힘들의 대리자들) 탓으로 돌린다면, 그리하여 이 힘들을 현상의 배후에 숨겨진 주어/주체로 삼는다면, 후자는 주체들의 의지로 귀착시킬 수 없는 객관적인 조건들에 초점을 맞춘다.

이 객관적 조건들 중 하나는 한국이 국제적인 지적 교류에서 언어적으로 고립되어 있다는 것이다. 지적 장(intellectual field)에 대한 피에르 부르디외의 분석을 전지구적인 수준으로 확장할 수 있다면—그러려면 전지구적으로 존재하는 단일한 지적 장의 존재를 가정해야 할지 아니면 국지적인 장들이 위계적으로 연결된 구조를 상상해야 할지는 토론해 보아야겠지만—, 그러한 분석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이 장(場)에서의 의사소통이 영어나 불어 같은 몇 개의 지배적인 지방어(vernacular)들을 매개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이 언어들을 모국어로 갖지 못한 지식인들은 국제적인 지식교환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처음부터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 사실은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지식의 흐름이나 연구자들의 이동이 왜 언제나 비대칭적인 양상을 보이는지 설명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준다. 가령 세계적인 수준에서 나타나는 유학생의 비대칭적인 흐름은 종주국-식민지 관계의 연장선상에서만 이해될 수는 없다. 남미 여러 나라는 종주국이었던 스페인, 포르투갈보다는 미국에 훨씬 더 많은 유학생을 보낸다. 또한 그것은 가난한 <남>과 부유한 <북>의 관계로 환원될 수도 없다. 일본은 세계 제2의 경제강국이지만 대표적인 유학생 송출국이기도 하다. 유학생의 흐름을 설명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열쇠는 바로 언어이다. 세계 10위 안에 드는

유학생 수용국들은 영어, 독일어, 불어 사용국가이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전통적인 의미의 “열강”에 포함되지 않지만 영어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오늘날 손꼽히는 유학생 수용국이 되어 있다. 반면에 경제수준이나 학문 수준에서 이보다 못할 것이 없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모두 10위권밖으로 밀려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세계 제일을 다투는 유학생 송출국—일본, 중국, 한국—이 모두 서양의 식민지배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역사적 특수성에서 기원한 언어적인 핸디캡은 이 나라들로 하여금 국제적인 지적 교류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외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강제하는 것 같다. 아닌게 아니라 이 나라들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한국의 지적 장의 비정상적 특징들—식민화의 “증거들”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다 : 유럽과 미국으로 향하는 끊임없는 유학생들의 물결 (중국, 일본, 한국, 대만), 외국박사학위소지자에 대한 우대 (중국, 한국, 대만), 서구의 지적 유행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 (일본, 대만, 한국), 영어를 못하는 것에 대한 열등감 혹은 영어를 배우려는 지나친 열기 (한국, 중국, 대만,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일본), 등등. 이 모든 것은 이 나라들이 자신들의 〈주변성〉을 극복하고 서구와의 〈동시성〉 속에 진입하기 위해 (혹은 머무르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가를 보여주는 듯하다.

〈부록〉 국내박사의 주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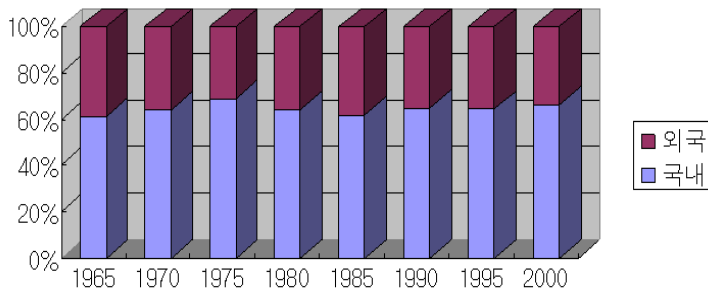
교수시장에서 외국박사학위, 특히 미국박사학위가 우대받는다는 것은 널리 인지되는 사실이다. 일자리를 구하는 박사학위 소지자의 숫자에 비해 대학들이 제공하는 자리는 터무니없이 적은 상황에서, 미국박사에 대한 선호는 국내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의 직업적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는 요인임이 분명하다. 우리는 이들이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온 동료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오랫동안 실업을 겪으며, 더 나쁜 조건의 일자리를 수락해야 할 것이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나아가 실업이나 반실업 상태의, 혹은 취업을 했더라도 끊임없이 더 나은 자리를 찾으면서 대기 중인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학계의 주변에 퇴적하는 현상이 이 논문에서 다룬 “지적 식민주의” 담론의 유행과 어떤 관련이 있지 않을까 추측해볼 수 있다.

하지만 국내박사의 주변화라는 명제가 일종의 상식처럼 통용되는 데 비해, 아직까지 그것을 경험적으로 검증해보려는 시도는 빈약했던 것 같다. 그러므로, “지적 식민주의” 담론에 대한 비판을 마무리지으면서, 이 논문의 마지막 몇 페이지를 이 명제를 증명하는데 바치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먼저 전국의 대학 교수 가운데 국내박사학위 소지자와 외국박사학위 소지자가 각각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가를 보기로 하자. 그림 1은 『교육통계연보』에서 관련된 자료를 5년 단위로 뽑아서 만든 것이다. 이 그래프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국의 대학교수 가운데¹¹⁾ 국내박사의 상대적인 비율이 1965년 이래 60%선에서 거의 고정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11) 시간강사는 제외하였다.

〈그림 1〉 대학교수 중 국내 박사와 외국 박사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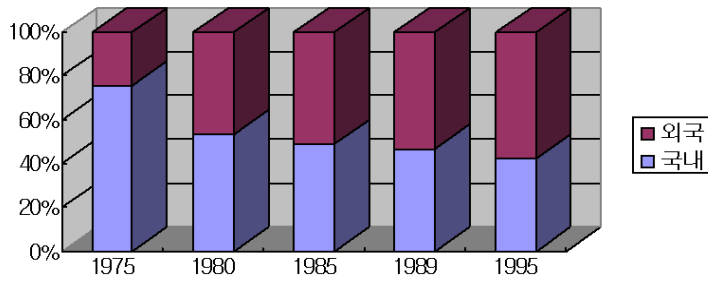


출처: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하지만 이 평균값은 눈속임이다. 알다시피 한국의 대학들은 서열화 되어 있으며, 서울에 있는 이른바 명문대의 교수직과 지방의 이름 없는 대학의 교수직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 같은 명문대만을 놓고 본다면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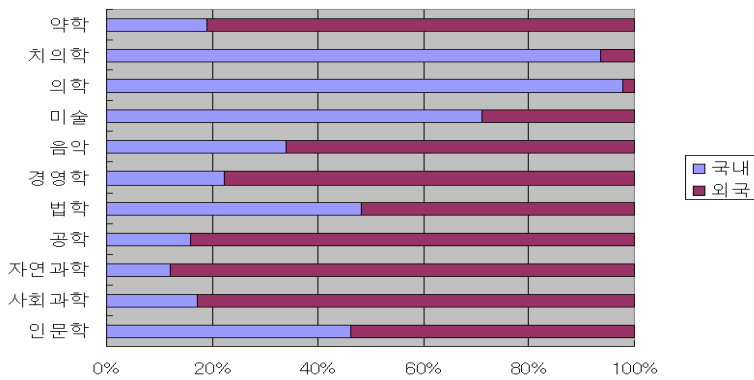
그림 2를 보자. 이 그림은 서울대학교의 교수진 구성에서 국내박사와 외국박사의 상대적 비율이 1975년에서 1995년 사이에 극적으로 뒤집힘을 보여준다. 이 이십년 사이에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교원의 비율은 60%에서 40%로 떨어진다. 말할 것도 없이, 이는 신입교수채용에 있어서 대학 측이 노골적으로 외국박사를 선호하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는 단과대학별의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 외국박사의 비율은 사회대와 자연대, 공대에서 특히 높으며, 의대나 치의대에서는 미미한 수준이다(그림 3). 인문대는 이 두 극단의 가운데에 있는데, 이는 국사학과와 국문학과 같이 비교적 “자급자족적인” 과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만일 이처럼—교수의 대부분이 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보자들 가운데서 충원된다는 의미에서—“자급자족적인” 또는 “폐쇄적인” 분야들을 제외한다면, 외국박사의 비율은 분명히 훨씬 더 높을 것이다.

〈그림 2〉 서울대 교수 중 국내 박사과 외국 박사의 비율



출처: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50년사』, 1996; 서울대학교, 『통계연보』, 1980, 1985, 1989.

〈그림 3〉 서울대 교수 중 국내박사와 외국박사비율: 단대별,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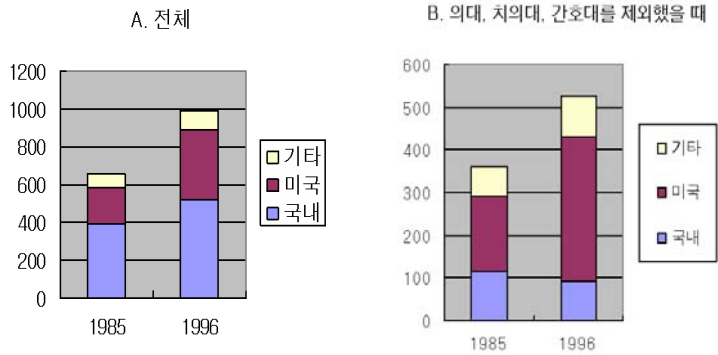


출처: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50년사』, 1996; 서울대학교, 『통계연보』, 1980, 1985, 1989.

연세대와 고려대의 교수진 구성을 분석해보아도 결과는 비슷하다. 『사립대학 교원명부』 1985년판과 1996년판에서 두 대학교의 교수명단을 뽑아서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동안 국내박사의 비율이 연세대의 경우 59%에서 52%로(그림4A), 고려대의 경우 65%에서 47%로(그림5A) 각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치의대, 간호대 같이 “자급자족적”이며 규모가 큰 단과대학들을 제외한다면 그 결과는 더욱 극적이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에 있어 국내박사는 이 기간동안 단지 상대적인 비율에 있어 서만이 아니라 절대적인 수에 있어서도 감소했다(그림4B, 그림5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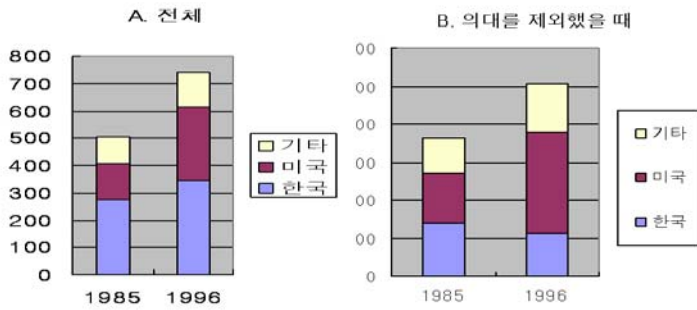
〈그림 4〉. 연세대 교수들의 최종학위 취득 국가



		국내	미국	기타외국
전체	1985	393	194	72
	1996	523	368	105
의대, 치대, 간호대를 제외했을 때	1985	116	176	69
	1996	91	339	94

출처: 한국대학교육 협의회, 『사립대학 교원명부』 1985, 1996.

〈그림 5〉 고려대 교수들의 최종학위 취득 국가 : 1985/1996



		국내	미국	기타외국
전체	1985	274	132	100
	1996	344	269	127
의대, 치대, 간호대를 제외했을 때	1985	141	130	94
	1996	112	267	127

출처: 한국대학교육 협의회, 『사립대학 교원명부』 1985, 1996.

참고문헌

1. 통계, 연감류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서울대학교, 『통계연보』 1980, 1985, 1989.
 서울대학교, 1996, 『서울대학교 50년사』.
 한국대학교육 협의회, 『사립대학 교원명부』 1985, 1996.

2. 국내저서

김동춘

2000 “한국 사회 과학에서의 탈식민의 과제,” 『비평』3 : 216-249.

김성기·이정우

1997 “현대 프랑스 사상을 보는 관점,” (대답), in 이정우, 김성기 외,
 『프랑스 철학과 우리』, 당대.

박홍규

1997 “역자의 말,” 에드워드 사이드,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신용하

1994 “〈독창적 한국사회학〉의 발전을 위한 제언,” (한국사회학회 94년도 회장 취임강연).

유선영

2002 “식민지 지식생산의 궤적,” 『스모그』3: 191-217.

윤지관

2001 “영어, 내 마음의 식민주의,” 『사회비평』28: 110-126.

조혜정

1992 『탈식민지 시대 지식인의 글읽기와 삶읽기 1』, 서울 : 또 하나의 문화.

1994 『탈식민지 시대 지식인의 글읽기와 삶읽기 2』, 서울 : 또 하나의 문화.

정일준

1991 “해방 이후 문화제국주의와 미국 유학생,” 『역사비평』15: 130- 142.

최종욱

1997 “현대 프랑스 철학의 비판적 이해,” 이정우, 김성기 외, 『프랑스 철학과 우리』, 당대.

홍성민

2003 “정치민주화와 학문의 종속,” 『교수신문』 2003년 4월 7일자.

3. 외국저서

Colletti, Lucio

1976 *Le Marxisme et Hegel*, Paris : Editions Champ libre.

Oe, Kenzaburo

1989 “Japan’s Dual Identity : A writer’s Dilemma,” in Masao Miyoshi and Harootunian, H. D., *Postmodernism and Japan*, Durham : Duke University Press. 곽동훈 외 옮김, 『포스트모더니즘과 일본』,

서울 : 시각과 언어.

Raulet, Gerard, et al.

1984 *Weimar ou l'explosion de la modernité*, Paris : Editions anthropos.

<Key Concepts>: Intellectual colonialism, linguistic handicap, autonomy of the intellectual field

Is the Korean Intellectual Field Colonized?

Kim, Hyon-Kyong*

This article offers a critic of the discourse on <<intellectual colonization>> which recently had a big impact among Korean intellectuals. This discourse has known several versions, as some developed in the 1980s invoke neocolonialism, whereas more recent ones analyse the situation as postcolonial. But they all converge towards three points.

First, they start from the common idea that the Korean intellectual arena deviates from the original path of the occidental model, because of its colonial legacy. The following facts are often put forward to illustrate this argument : 1) first, student migration has been institutionalized as an indispensable step toward the reproduction of the intellectual field ; 2) intellectuals educated abroad, and especially in America's prestigious universities, are given an undisputable predominance ; 3) The knowledge of English is overestimated as an index of intellectual competence, so that the scholars educated in english speaking regions are excessively advantaged ; 4) americanization of research and teaching curricula ; 5)

* Lecturer, Department of Anthrop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blind importation of western debates following the latest american intellectual fashions ; 6) devaluation of intellectual products <<made in Korea>>.

Second, they tend to transform any intellectual debate into a power struggle between external and internal forces, moreover supposing that those external forces have their own agents within the field.

Third, they deny the universal value of the intellectual products. They are not satisfied to confirm the general propositions on the knowledge-power relation but they distinguish between indigenous theories and imported theories while giving a political meaning to their consumption.

Each of those points constitute a reason why we should reject the notion of intellectual colonization. This article criticizes each of them both empirically and logically and concludes that the Korean intellectual field is « marginalized » rather than « colonized ». A crucial factor of this marginalization is the fact that the international intellectual exchanges are using very few predominant vernaculars and that Korean intellectuals are generally poor at those languages.